

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5.25 vol.169

www.jthink.kr

연구진
조강욱,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주연,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5.25 vol.169

CONTENTS

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I. 저출산과 자녀돌봄 이슈	4
1. 저출산의 늪과 지방소멸	4
2. 자녀돌봄 현황과 이슈	5
II. 자녀돌봄 정부정책과 지역의 대응	7
1.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
2. 돌봄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응 사례	8
III. 돌봄서비스 정책방향 및 활성화 방안	10
1. 전북형 양육친화 지역사회 조성	10
2.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응	10
3.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11
4.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지원	12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림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복' 만들기로 대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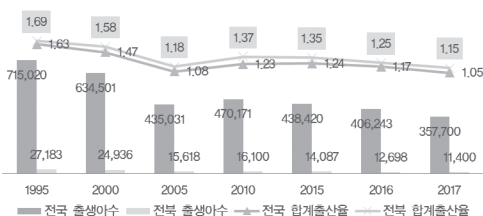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3가량이 소멸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는 '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간 돌봄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의 시설중심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초등돌봄 절벽이나 여성의 독박육아, 취업모를 위한 포괄적·연속적 서비스 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 재정비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지역차원의 대응과 관련 준비 등이 필요한 시점임
- 본고에서는 최근 돌봄정책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지역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적인 전복 만들기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 취약계층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 지자체는 돌봄정책 집행자 → 기획자로 역할수행 변화 필요
 - 돌봄정책을 포함하는 인구정책패키지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 돌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구축과 역량강화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I. 저출산과 자녀돌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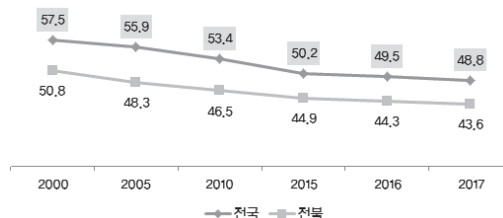
1. 저출산의 늪과 지방소멸

■ 초저출산현상 장기화, 지방소멸 위기

- 범 정부적 행·재정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 저출산 현상 갈수록 심화**
 -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 출생아수 35만 8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기록, 출산율이 당초 최저 수준 전망(1.07명)보다도 낮아짐에 따라 5년 이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 2017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 수는 11,400명으로 전국 총 출생아수 (357,700명)의 약 3.2%를 차지함.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1.05)에 비해 다소 높음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향후 30년 내 37%(85개)가 소멸 위기지역에 해당,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 시급**
 -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따르면 전북은 정상단계 1곳(전주)과 소멸위험진입 10곳, 소멸주의 단계 3곳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기준이 되는 가임여성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가임여성인구 비율(43.6)은 전국 평균(48.8)에 못 미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전북의 저출산 대응은 가임여성인구를 주요 타깃층으로 삼고 이들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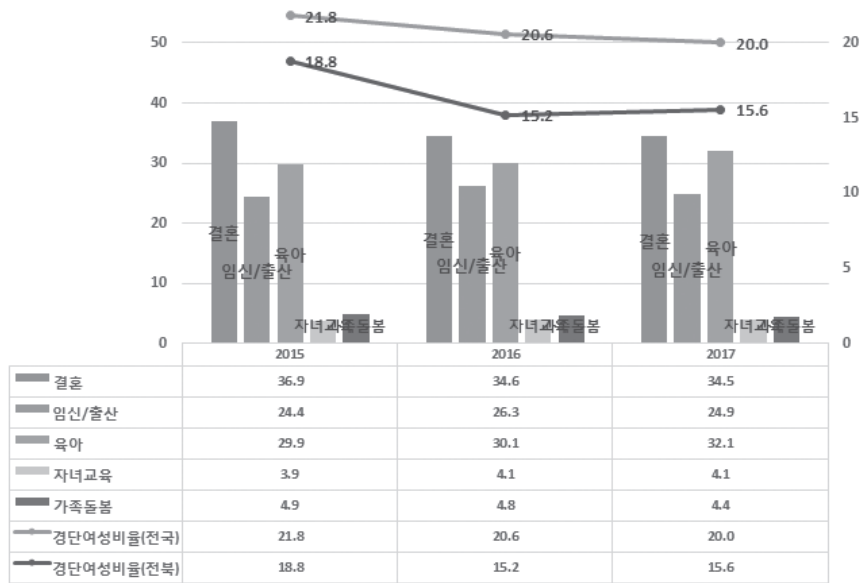
〈그림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그림2〉 연도별 가임여성 인구비율

■ 자녀양육과 돌봄은 여성경력단절과 저출산의 주원인

-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현재, 20.0%로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 현상을 겪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전국 경단녀는 1,812천명, 전북은 46천명임.
 -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34.5%)을 제외하고는 주로 육아(32.1%), 임신·출산(24.9%),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노동이 경력단절 사유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3〉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및 경력단절 여성 비율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삶과 돌봄정책이 우선되어야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 됨
 -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삶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權. 12)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저출산을 극복한 서구사회도 육아인프라 조성 및 돌봄정책 등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접근

- 프랑스(1.92명), 노르웨이(1.73명), 덴마크(1.71명) 등 출산율을 제고에 성공한 국가의 특징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인프라 환경 조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함
- 따라서 지역차원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핵심역할을 하는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곧 저출산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함

2. 자녀돌봄 현황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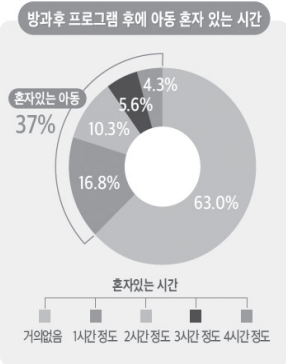
■ 초등돌봄 등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돌봄 사각지대 발생은 만 0~6세에 해당하는 영유아보다 초등학생(만7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 자녀 중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후에도 37%의 자녀는 돌봄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보호자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아동'임(여성가족부, 2015)

-초등 저학년(1~2학년) 돌봄공백은 심각한 수준으로 오후 1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명‘하교쇼크’는 직장여성의 일·가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실제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5,841명 퇴사한 것으로 보고됨(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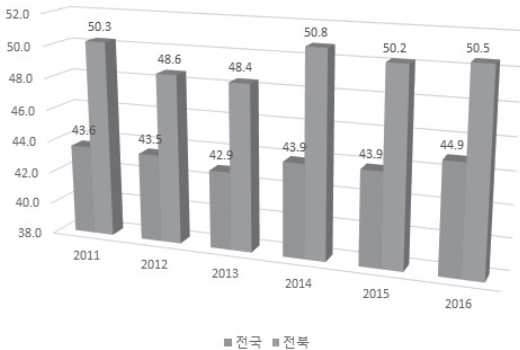
연령	영유아(315만명)						초등학생(267만명)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시	국가 책임 보육	▶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아동수당, 양육수당						초등 책임 돌봄	▶ 학교정규수업(9시~13시·15시) ▶ 초등돌봄교실(24만명)					
13시-19시		사각지대												
19시 이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지역아동센터 등(9만명)							

자료: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정책참고자료(2018.4.4.)
201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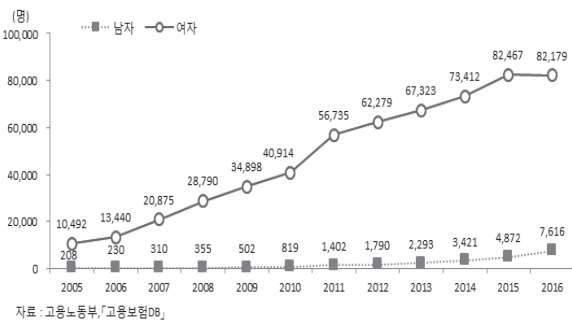


■ 여성에게 편중된 ‘독박육아’

-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맞돌봄은 부재, 육아휴직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육아와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
 - 2016년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9%(전북 50.5%, 22만 2천가구)로 2011년 조사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갈수록 맞벌이는 늘지만 맞돌봄은 부재한 실정이라서 성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는 7,616명, 여자 육아휴직자는 8만2,17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91.5% 가 여성에 해당함
 -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인식과 직장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독박육아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취업모의 일·육아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4〉 맞벌이 가구 현황
자료: 통계청(2017),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5〉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2017), 고용보험 DB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연속적·포괄적 돌봄서비스 부재

- 취업모의 증가와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시설보육 서비스가 이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보육시간 이외에도 초등아동의 등교전이나 방과 후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수요가 발생하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연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이와 같이 기존의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는 탄력적인 자녀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함

II. 자녀돌봄 정부정책과 지역의 대응

1.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돌봄서비스 문제점과 개선안

-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상호연계 부족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각 부처에서는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간 진행된 돌봄사업은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달체계 구축도 미흡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보도자료, 2018.4.4.)
 - 이에 따라 현행 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처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관계부처합동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넉넉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계획'등임

〈표 1〉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대상	초 1~고 3학년	초 1~6학년	만 18세 미만	만 12세 미만	초 4 ~ 중 3학년	18세 미만
운영규모	11,775개교 365만명 (초등 176만명)	11,920실 (초등 24만명)	4,107개소 총 11만명 (초등 8만명)	10개소 총 140명*	250개소 총 1만명 (초등 6천명)	120개소 51만명 (이용 연인원)
운영형태	자율적 선택 일시 돌봄형태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 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영 : 유아 중심 상시 : 일시돌봄
지원형태	유상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무상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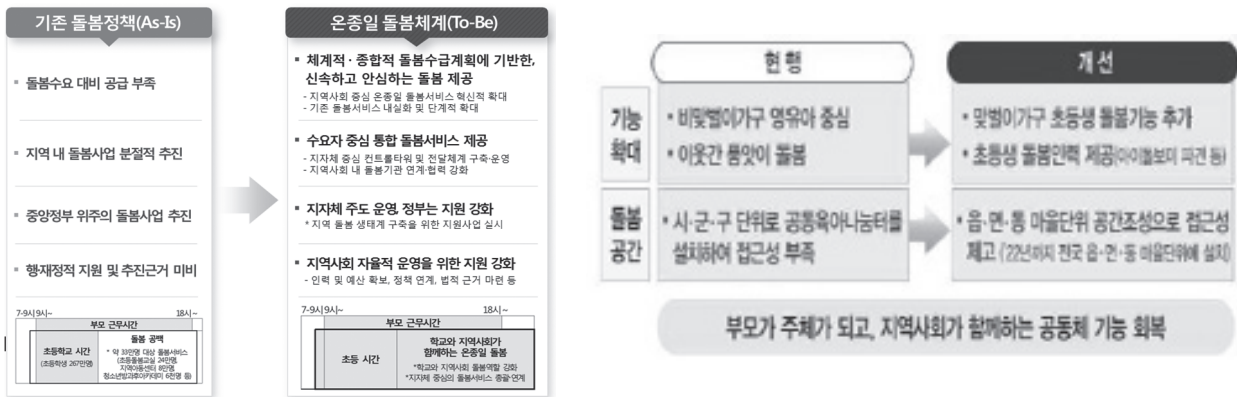
자료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보도자료(2018.4.4.) 재구성

■ 수요자 및 지역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2018.4)

- 정부합동으로 추진되는 본 계획은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학교돌봄’을 통해 대상자를 기존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내 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마을돌봄’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
 - 지역 맞춤형 돌봄사업의 유용한 모델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돌봄 생태계 구축’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2018년 전국기초지자체 대상 10개 지역선정, 부처공동 출자로 3년간 예산지원)

■ 다양한 돌봄유형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계획’(2018.3)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구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
 -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반적으로 전업맘 중심의 돌봄서비스로 운영되어 직장맘 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함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로 돌봄공간 조성을 확대 추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



자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보도자료(범정부 공동추진단, 2017.12.2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3.19.)

2. 돌봄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응 사례

■ 사례1.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 추진배경
 - 2012년에 육아를 매개로 마을(공동체)을 확산하고자 추진. 즉 마을공동체사업과 공동육아의

사회적 확산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

- 사업내용
 - 2012~2017년 총 191개 모임이나 단체가 공동육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 품앗이 돌봄, 초등병행, 숲놀이/나들이중심/거점형, 마을사업형, 어린이집형, 직장맘, 장애아 등 수요자의 중심의 다양한 보육이 가능
- 정책시사점
 -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3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공동육아사업의 자발성, 주체성, 독립성,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

■ 사례2. 경기도 과천시형 공동체 ‘마을돌봄 나눔터’

- 추진배경
 - 인프라 부족 등으로 빚어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내용
 - 마을·아파트 단위 유희 및 공용 공간에 초등 방과 후 돌봄터 조성하여 출퇴근시간, 방과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일시적 또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정책시사점
 - 취업모의 초등돌봄 절벽을 해소할 수 있고 전업맘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의 한계를 보완

■ 사례3. 전북 완주군 공동체 공유협력 모델: ‘손가락’공동육아

- 추진배경
 - 귀농귀촌으로 연고가 없던 지역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들이 함께 모여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모임
- 사업내용
 - 귀농귀촌 11가구 17명 아동(1세~6세)/ 교사1인, 부모교사1인
 - 연회비 100만원, 월회비 5만원(완주군지원: 교사 인건비 일부지원)
 - 공동육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간마련을 위해 3개의 공동체(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완주 아줌마 뜨래 제과제빵 생산자협동조합, 공동육아 모임 손가락)가 함께 모여 협력
- 정책시사점
 - 귀농귀촌 정책 등을 통해 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자체에서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 활성화가 필요

■ 사례4. 제주형 수놓음육아 돌봄 정책

- 추진배경
 - 성장 단계별 돌봄서비스의 단절과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공동체 돌봄 확산을 통해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한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수놓음은 품앗이의 제주도 사투리)
- 사업내용

- 마을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제주도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5,000만원 지원하고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2017년 현재 총 20개소, 2019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1개소씩 총43개소 설치 예정
- 운영방식에 따라 주민자치형, 직장형, 기관지원형, 농촌거점형 등으로 운영되며 제주가족친화센터를 설립하여 중간 지원기관으로 활용

- 정책시사점
 - 돌봄 공동체를 통해 마을 공동체로 외연을 확장을 하려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출산정책의 도구적 접근이 아닌 가족이 행복한 마을생활이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형성됨

I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서비스 정책방향

1. 전북형 양육친화 지역사회 조성

■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 기존의 시설중심 돌봄정책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생기는 초등돌봄 절벽, 여성의 독박육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가 제3의 육아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북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이나 공유경제를 토대로 형성된 협동조합 등의 인프라 형성이 특화된 지역임. 따라서 마을기업형 돌봄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북형 돌봄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취약계층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 자녀양육 및 돌봄의 양성 평등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에 주력해야 함.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는 주로 여성,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남성, 민간기업, 비정규직 대상으로 확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모성보호에 취약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크므로 여성근로자의 노동복지, 육아휴직 및 일·가정양립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기업CEO 대상의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온라인 포털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추진

2.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응

■ 지자체는 돌봄정책 집행자·기획자로 역할수행 변화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인 정부의 양육과 돌봄정책 개선안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지자체의 책무성과 역할비중이 확대되고 운영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돌봄정책과 제도에 대해 그간 집행자 역할을 해오던 지자체가 돌봄제도의 종합적 추진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향후 지자체는 돌봄제도 추진을 위한 자체 예산수립과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 출산·돌봄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인구정책패키지화

-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등으로 우려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서둘러 인구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체는 모호하며 관련 업무 범위도 구체적이지 않아 독자적 영역구축이 필요
- 한편, 출산율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확대하여 접근하려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요인 중의 하나인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인구정책은 돌봄정책의 통합적 거점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포함하고 출산율 제고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우선순위와 중요성,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출산-돌봄-인구정책을 조합한 '인구정책패키지화' 전략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3.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 돌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지역사회 내 돌봄 커뮤니티 형성과 양육자를 위한 자치활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시설, 제도시행 관련 조례제정 등이 요구됨
- 돌봄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작년 말부터 각 지자체들이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육아 운영 예산 항목의 여부이며 예산지원을 통해 공동육아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함

〈표 2〉 공동육아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제정일	조례명	예산 및 운영 지원 내용
서울	2017.11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2017.07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에서 보조금 교부
충남	2017.12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북	2017.11	익산시 공동육아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보조금에서 보조금 교부

※자료 : 2018년 5월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구축과 역량강화

- 돌봄서비스 주체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내 돌봄수요에 대한 조정·배분 및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의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간(아파트, 주민센터, 노인회관 등), 인력(자원봉사자, 은퇴교사), 운영(돌봄 프로그램)에 관한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자원연계를 위한 지역돌봄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등을 제공해야 함

4.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와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확대

- 여가부가 확대추진하려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공동육아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이 상호 협동을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제3의 육아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반영하기로 계획함
- 전라북도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개소수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공동육아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및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remodeling), 민간자원 공간(아파트단지, 기업, 대형마트, 백화점 등)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함
-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은 취업맘이나 비취업맘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형, 직장형, 기관지원형, 농촌거점형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추진하도록 함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2018),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돌봄유형을지원한다, 보도자료(2018. 3. 19.)
(2018), 1982년생 김지영'세대, 자녀돌봄과 지역공동체 역할, 2018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보도자료(2018. 4. 4.)
(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2018. 4.19.)

광주전남연구원(2017), 아이키우기 좋은 전남, 육아공동체에서 대안을 찾다(제60호)